

자료집♡

〈토론회〉 "기본소득과 청소년"

-청소년과 기본소득의 적절한 만남

2010년 6월 19일 토요일 14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1층 아동청소년센터

사회 : **밤의바왕**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발제 및 토론 :

김성일 (기본소득네트워크) : "딱히 기본소득운동을 같이 하자는 건 아니니까!"

발칙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본격 학교 앞는 기본소득"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 "20대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패륜적 기본소득"

주최 :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학생사람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후원 :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딱히 기본소득운동을 같이 하자는 건 아니니까!

김성일(기본소득네트워크)

들어가기 전에:

사회자 이름 위엄(...)

1. 히타기 크랩¹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필리페 판 빠레이스²는 기본소득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
2. 일회적 지급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3. 국가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공동체 단위로도 지급할 수 있는 소득
4. 세금을 통한 재분배 혹은 자원 분배를 재원으로 하는 소득
5. 정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소득
6. 개인을 단위로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
7. 자산 심사 없이 지급하는 소득
8.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를 묻지 않고 지급하는 소득

기본소득은 지역과 사람에 따라 기본소득, 시민소득, 보장소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는 기본소득이 어느 한 사람의 돌발적인 주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논쟁의 역사를 통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기원을 따지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을만한 주장들은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자코뱅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1794년의 연설에서 사회는 성원 모두에게 물질적·사회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최우선적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전제군주적 정치경제'가 탈취 과정에서 비롯되며, '민중적 정치경제'를 위해서는 자연적 유산-토지를 비롯한-을 탈취당한 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시대를 살았던 토머스 페인은 이 '탈취'와 '보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토지가 자연적 유산이라는 논리에 따라 '토지독점'을 수탈로 규정하였고, 자연적 유산을 상실한 모든 이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방법으로 사유지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기금'을 창설하고, 21살 이상의 모든 이들에게 매년 총액 10파운드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그가 이 모든 조치를 사회성원에 대한 '자비'가 아니라 사회성원의 '권리'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샤를 푸리에 역시 자신이 제안한 새로운 공동체 아이디어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의식주에 필요한 소득을 무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문명화된 질서가 인간의 자연적 생계의 권리, 즉 수렵, 어업, 채집, 방목 등을 박탈했다고 볼때 토지를 빼앗아간 계급은 빼앗긴 계급에게 그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제안한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노동을 선택할 수 있었고, 모두가 그 공동체의 주인이었다. 이 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식주에 필수적인 소득이 조건 없이 보장되었다. 푸리에에는 그러한 공동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려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의식주에 필수적인 소득' 아이디어는 푸리에주의 작가인 조셉 샤를리에가 한층 더 구체화하였는데, 그는 모든 시민에게 의회가 매년 정하는 금액을 매월 조건 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토지배당, 혹은 보장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1 제목은 웨이크

2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벨기에 루뱅대학 교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가 독자적으로 역사에 발자국을 남긴 것은 1980년대 중반, 벨기에에서 ‘샤를 푸리에 씨클’이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돈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달 지급하라’는 선언을 발표했을 때였다. 이들의 선언을 전후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대는 점점 폭이 넓어져서 1988년에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 BIEN(Basic Income Europe Network)라는 이름으로, 2004년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동북아에서도 2009년 한국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BIKN), 2010년 일본에서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BIJN)가 각각 발족했다.

2001년, 브라질 상원 의원 수플리시에 의해 기본소득은 제도권에서도 강하게 주장되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수플리시가 기초한 시민기본소득 입법안이 브라질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고, 2004년 1월 8일에는 룰라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실업자들, 정치인들, 성직자들, 과학자들과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다. 이들은 2004년 7월 독일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창립했고, 뒤를 이어 연방전역에 걸친 65개 청소년단체의 네트워크 독일연방청소년클럽(DBJR)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의 기본소득 운동은 1980년대 실업자 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는데, 이 운동은 임금노동에 대한 거부, 교육과 문화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창립 당시 회원 50여 명에 불과하던 독일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5년 동안 2,000명 이상의 개인과 60개 이상의 단체로 늘어났다. 2009년에는 52,000명 이상의 독일 시민이 온라인 청원을 통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요구했고, 같은 해 가을 총선에서는 적어도 100명 이상의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사실 여기까지는 별로 읽지 않아도...

2. 마요이 달팽이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촉발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광노원³ 등이 꾸준히 기본소득을 주장해왔으나 이 논의는 좌익진영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조차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물 뿐이었고, 2009년 민주노총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첫 책자 발간과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창립, 2010년 1월 기본소득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범진보진영이라는 좀더 큰 찻잔으로 옮겨갔다.

찻잔이 바뀐 뒤로 얼마 되지 않는 기본소득 운동가들이 직면해야 했던 것은 광범위한 비판이었다. 그 비판들은 민주노총 모델에 국한된 비판에서부터 체제담론에서의 적용까지 주로 ‘기본소득 정착 이후’에 대한 것으로, 모두 가치에 대한 논의는 워프해버린 비판이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이 무수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 답하고 나서 비판자들에게 새롭게 들어야 했던 비판은, “마치 기본소득이 만능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비판이었다.

“기본소득이 가치로서 유의미한가” 즉 기본소득을 우리가 욕망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구성된 바가 없다.⁴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의 물질적 독립을 가져올 것인가, 또 물질적 독립이 우리들 자신과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큰 찻잔으로 옮겨오지 못한 논쟁이다. 이것은 개별적인 우리가 기본소득을 욕망하는(혹은 부정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이거나, 아니면 딱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국물부터 들이키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과하게 잡다해진 기본소득 논의를 순수한 ‘기본소득’ 그 자체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기본소득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별개의 문제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노동, 체제전환, 조세재정 등의 문제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로드맵’에는 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소득 그 자체가 가진 이야기는 아니다. 기본소득이 그 자체로 의미하는 것은, “사회가, 당신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 댓가로 당신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한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것이다. 운동가들에게는 아마도 “사회가 당신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청소년들에게는 “당신에게 생계독립을 위한 비용을 사회가 지급한다”고 말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의 도덕적 명분, 또 예상할 수 있는 효과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바로 ‘자유’라는 관점, 굳이 길게 이야기 하면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되겠다.

3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연기금 사회주의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사회연대소득”을 주장해왔다. 본인에 의하면, 축구로 박지성을 이길 수 있다고.

4 물론 대자본에 의한 노동력 지배를 사회의 옳은 모습으로 인정하고, 임금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받는 것을 올바른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기본소득을 직감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들은 자신의 도덕적 고결성을 지키기 위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데, 나는 이 의견에 찬성할 순 없지만 그들의 그러한 입장을 하나의 정당한 욕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스루가 몽키

간섭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고민하던 도중, 마침 발제문을 쓰는 와중에 어머니가 방에 난입해서 내 긴 머리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돌입을 저지하고 방문을 닫았으나, 곧이어 2차 진입시도에 대응해야 했다. 이런 종류의 갈등은 “가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부자유에서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그 정체성을 ‘자유주의’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자유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에 불과하다. 즉, 고의적 간섭에 대해서는 대항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비고의적 간섭에 대해서는 필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유에 대한 좀더 확고한 보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배적으로 조정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권리에 휘방을 놓고 있는 가장 큰 적은 ‘소득’이다.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허무할 정도로, 사회는 개인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거래를 통해서만 지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임금노동에 대한 댓가로, 임금노동이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빈곤한 일부에게는 심사와 통제,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다. 물론 이 모든 기회로부터 박탈된 이들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가 성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정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며,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는 “불쌍한 자들에 대한 시혜”로서 취급된다. 특히 기본적인 노동과 소득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공통된 구호에서 잘 드러난다. ‘노동’이라는 의제에서 가장 격한 대립을 일으키고 있는 관계, 고용자를 따르는 이들과 노동자를 따르는 이들의 양쪽 진영에서 이 구호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다. 다만 그들은 “누가 일하지 않는 자인가”라는 주제로 싸우고 있을 뿐이다.⁵ 이들은 소득과 노동에 대한 통제로 사회성원들을 지배하는 것을 긍정한다⁶.

이러한 소득의 조건성은 사회성원에 대한 통제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서 통제가 그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얻는 소득의 불충분함에 의해 통제는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임금노동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은 사측의 부당한 요구 - 때때로 도덕적 자유를 부정하는 - 를 따라야 하고, 수급자들은 행동과 일상에 통제를 받는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소득이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가족관계의 통제를 낳는다. 소득이 노동을 전제하는 사회에서 노동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이 “가족”이다. 친족간의 부양의무는 사회규범 수준을 넘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회는 이에 대해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의무를 가족에게 분담하는 셈인데, 이로 인해 가족을 가진 이의 빈곤상태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구성원간의 통제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한 이는 사회와 가족에 의한 이중간섭⁷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 간섭의 상태는 개별적 인간의 용기있는 선택으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사회 안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회에 강제로 편입되며, 사회 의무에 따를 것을 요구받는다. 사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결혼, 주거 등 생활의 변동을 사회에 신고하며 관리를 허용한다. 살아가기 위해 세금을 내고, 법률에 따라 통제받는다. 그리고 이 통제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통제를 허용해야 한다. 이는 사회가 사회구성원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개인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일어나는 결과 중 하나다. 이러한 통제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상당 부분 없앨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이 강요된 가족관계를 해소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생계문제만이 아닌 제도적 구속, 사회문화적 관계 등 더 직접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 기본소득은 자신이 자립을 선택한 개체에 한해 그 생계적 자립을 보장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4. 나데코 스네이크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노동과 소득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도 개인의 물질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완전고용-소년인구에게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을 이루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용으로 인한 통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인데다, 이 노동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을 억지스럽게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다. 모두가 정말로 ‘자신이 선택한’ 노동을 할 수 있는가? 영유아⁸도? 어린이도? 강제된 학

5 안그런 사람도 많다.

6 노동과 소득의 분리를 주장하지만 노동이 어느 정도는 강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7 뭘 소리냐 이게.

8 말은 통하나?

습노동 이외에 노동의 개방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성장주의 고용정책을 주장하는 이들은 기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노동은 그것이 공동체의 번영에 이바지할 때만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노동을 오직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완전고용을 이룬다면 그것이 정말 자축할 일일까? 기술의 진보는 일자리를 점점 줄이고 있고⁹, 대운하를 파지 않는 이상 실업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기술 혁신의 효과로 경제 규모가 늘고, 그에 따른 추가 고용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자리 축소가 일어난다는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강제된 노동에는 권리의식을 부여할 수 없다. 우리는 “노동권”을 주장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생존권”이다. 노동하지 않는 자의 생존권 박탈을 우리가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고도 살아갈 권리”는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일하고 싶다”라는 구호의 이면에는 “오로지 노동으로만 생존을 거래하겠다”는 규범이 존재하는 것. 이것은 전혀 “노동의 권리”가 아니다. 기본소득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이탈”이나 “노동의 회피”가 아니라, “노동강제로부터의 이탈”이다. 노동을 오로지 권리의 측면으로 다시 세우는 것. 박제된 문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있는 의미로 “노동권”을 되찾는 방식이다.

5. 츠바사 컷

당신과 이견회는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주권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권리와 의무는 같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권리적 측면에서 우리는 선별 당하고 차등하게 취급되지만, 의무는 평등하게 나누어 받는다. 권리의 불평등은 의무에 있어서도 ‘결과적 불평등’을 낳는다. 더 많은 권리를 보유한 자는 더 많이 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더 적은 권리를 가진 자는 상위 권력자들이 회피한 의무마저 자동으로 나누어 받는다. 차등한 권리는 권리의 양극화를 가속한다. 이 양극화는 가계를 통해,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는 방식으로 영속성을 띤다.

모든 개인의 주권은 모든 개인의 독립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권리는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수반되어야만 온전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는 물질적 독립으로부터 비롯되고, 따라서 개인의 권리 역시 물질적 독립으로부터 비롯된다. 임금노동을 중단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 고용주에 의해 빈곤선이 결정되는 사회는, 모든 개인의 사회적 권리가 그의 고용주에게 몰수당해 있는 사회다. 물론 의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회가 가능한가”라고. 흥미롭게도 기본소득에 대해 선전할 때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답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중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한 사회가 불가능 하다면 아마 그 이유는 그러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좀더 짚어서 말하면,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당신이 그것을 주장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정말로 현실에서 가능한가에 대해 누군가가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들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도대체 누가 그것을 주관하여 “공허한 망상이 아니라 현실”로 구현한단 말인가?

전 지구적 권력이?

전 지구적 국가가?

전 지구적 또라이들이?

9 “업무가 편리해지고,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인식은 인정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드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은 부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 답하고 싶다. “또라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¹⁰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이 발표를 듣고 있는(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상황에 처한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다수 대중의 눈엔 또라이다. 어차피 도찌개찌이라면, 더 솔직한 또라이가 되는 쪽이 낫지 않을까?

따...딱히 기본소득 운동을 같이 하자는 건 아니다.¹¹

10 개드립이다.

11 촛대레 서비스.

본격 학교 앞는 기본소득

발칙한(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지금부터 김치국을 마실꺼당.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0세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5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그것이 친권자들에 의해 남용되지 않게 방지해주는 최소한의¹²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된다는 가정을 해보자. 어찌 더니꺼 친권자는 찌는 존재이니 그들이 돈을 꿀꺽 할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테고, '미성숙'한 청소년 따위가 돈을 받아봐야 유흥비로 탕진하겠지 하며 촌촌대는 사람도 있을법하고, 야자에 학원에 강제학습당하느라 유흥비로 쓸 시간조차 없을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거다. (현실은 유흥할 공간이 없당...)

어느정도는 모두가 맞는 말이다.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현재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식의 블링블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거라고, 비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바뀔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고, 이런저런 균열들이 생기면서야 비로소 큰 틀들이 바뀌기 시작할테다. 그 큰 틀들 중에 학교가 있다.

남한의 청소년에게 학교란 무엇인가. (뜨든.) 대부분에게 가정과 더불어 억압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시간과 즐거움과 권리의 블랙홀이당. '다니기 싫지만 어쩔수 없지,' 하며 비장한 스멜을 풍기는 대사가 난무하는 그곳, 왜 '어쩔 수 없지,' '다녀야만' 할까. 고통스럽지만 깊이있는 학문을 통한 진리의 탐구를 위해? 안다닌다고 하면 아빠가 족치니까? 당장 나가면 할게 없어서? 대학 졸업장 없으면 정규직이 못되니까? 첫번째 경우라면 남한이 아닌것 같고(...) 두번째 경우에 관해선 공현이 패륜적으로 설명해 줄테고, 여기서는 세번째와 네번째의 경우를 보자.

"야 년 학교 왜 다니냐? 재미없지않아?" 하면 "어차피 나가봤자 할게 없잖아." 하는 애들을 꽤 많이 봤당. 여기서 '할게 없다'는 말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레알 할게 없어서 심심하다는 뜻과, 먹고살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의미. 전자처럼 규제랑 강제 찌는 학교가 그래도 심심한것보다 낫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캐암할거당. 모두가 머리카락을 한개씩 뽑으며 대체 청소년에게 얼마나 놀이공간이나 놀거리가 없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할 거다. 후자라면 18세미만의 노동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해야하고, 알바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연하지만, 여기에 기본소득이 없어진다면 청소년의 생존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당장 생계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학교를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진다.

대학 졸업장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을 굳이 해야겠다는 청소년들에게는 기본소득이 재학이나 진학 여부에 직접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를 '선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청소년이 주위에 늘어나고,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이들이 조금씩만 늘어나도 다른 학생들이 그 영향을 받는것은 물론, 현재의 '못견디겠으면 나가셈' 식의 일방적 학교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다. 두발규제와 교복, 체벌을 남발하고 내신 챙기려면 알아서 들어라 식의 수업이 계속되는 학교라면 청소년의 '선택'을 받지 못할테니. 이런게 레알¹³ 학교 선택제이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에 진학 워너비만 남는다면, 그것도 그 나름의 파장이 있을테고.

기본소득의 목적 중 하나는 다들 알다시피 '강요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당. 그러니까 '강요된 노동을 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아동바동 입시경쟁에 취업경쟁에 매달리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모양새도 많이 바뀔 텐데, 그렇게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정규직 취업을 하려고 학벌을 따고 자격증을 따야 하는 압박이 약화된다면 경쟁적 교육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줄세우기 위한 경쟁, 등수를 위한 점수 매기기, 이딴 것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본소득은 학교가 취업과 입시를 위한 학원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징.

12가 뭘지는 나도 모른다. 같이 얘기해보자며... 어렵다며...

13명박교육의 기만적 '고교'선택'제 같은거 말고.

당연히 이걸 다 개드립으로 볼 수도 있당. 기본소득이 어찌어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그 과정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지급 대상 연령이 0세는 커녕 18세, 19세 마냥 높아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결국 기본소득이 정말로 청소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학교를 옹호하는 효과를 내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세력화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의 김치국 마시기는 그 목소리의 일환이당.

20대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박정훈(대학생 사람연대)

87년 체제와 386

80년대는 한국의 경제가 박정희식 개발독재에서 자유시장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쟁취가 시대의 중요한 이슈였지만, 시장역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자유가 어느 정도 필요했다.

하지만 전두환정권 당시 국제그룹이 국가권력에 의해 해체되고, 92년 선거에 정주영회장이 정치권력에 대한 울분을 풀고 싶은 듯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등, 아직까지는 국가권력이 우위에 있었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대학사회역시 시장권력보다는 국가권력과 마찰과 융합이 많았다. 80년대까지의 한국의 고도성장은 고급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낳았고,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위는 높았고, 양적으로도 늘어났다. 대학사회는 국가 엘리트의 입문 장소이자, 국가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당시 다른 영역의 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주역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컨대, 시대의 주요과제인 민주화운동의 주요장소는 대학, 주체는 대학생이었던 시대였다.

97년 체제와 당시의 10대

위에서 상술했듯이, 신자유주의는 대학의 상업화를 가속화시켰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개정, 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줬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시장권력의 등장과 그에 따른 대학의 상업화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87년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시장권력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학생사회역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기업의 후원이나 유명한 가수를 축제에 데려오는 것이 학생회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시장에 얼마나 종속적 인가가 자치활동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87년의 사람들 역시 경제성장이데올로기에 무기력했으며, 종속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노동운동역시 정규직중심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시작됐다. 2002년 촛불정국은 미완성의 87년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났다. 호순이, 미선이 장갑차 사건은 사람들을 들끓게 만들었고, 당시의 10대들 역시 촛불을 들었다.

그 결과는 87년의 원칙을 지켰던 노무현이라는 인물의 당선이었다. 2002년의 촛불은 노무현으로 수렴됐고, 당시의 10대들은 더 이상 촛불을 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기대했고, 물론 그것은 시장권력을 건드리지 않았다.

사회문화적으로 본 당시의 10대 (05/06 세대 이후)

이 때 촛불을 들었던 중, 고등학생들은 97년 체제의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다. 이들은 IMF를 겪었고, 이해찬의 자율교육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뉴스에서는 연일 교실붕괴를 보도했다. 아이들은 교실을 뛰어다니거나 앞드려 자고 있었고, 선생님은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어쩌면 통제하지 않았다. 내신만 잘 보면 대학에 갈 수 있다거나, 논술교육을 해야 한 다거나 하는 소문들이 무성한 시기였다. 학부모는 불안했지만 곧 해결책을 만났다.

이 혼란의 시기를 해결해준 것은, 사교육시장이었다. 인터넷강의회사가 주식시장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순간이었다.

사교육 시장은 학부모들에게 교육상품을 제공했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아닌 사교육시장을 선택했고, 10대들의 교육환경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쉬는 곳, 학원은 공부하는 곳, 선생님에게는 경제 위기에 불구하고 고용을 보장받는 안정된 직장이 됐다. 서로의 관계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매개됐다. 최근 몇 년간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범대를 선택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안정된 직장이기도 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부모의 헌신적인 투자는 10대들에게 부모의 간섭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일으켰다. 10대들의 삶은 철저하게 관리됐고 이유 없는 반항, 사춘기는 사라졌다.

2007년 체제와 20대

2007년은 이명박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했고 97년의 체제는 비슷한 10대 시절을 지낸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다. 대학은 80년대의 국가권력과 다른 성격의 시장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2009년 국정감사를 통해 몇몇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의 손해를 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포스코관', 'SK관' 등 기업의 이름을 딴 건물이 대학 내에 없는 것이 더 이상한 지경이다.

학생들 중 일부는, 등록금이 높아지는 것을 대학의 퀄리티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은 학교의 구성원, 학교의 주인과 같은 정치적 주체(학교사회의 시민)이 아닌 대학상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

20대들은 대학상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발달 했고, 과제제출방식, 평가방식, 레포트의 양, 취업률 등등에 대해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자치활동공간이 담당해오던, 도전, 패기, 열정과 같은 20대 들의 언어와 덕목역시 시장에 빼앗겼다. '생각 되로', '쇼를 하라'는 기업의 마케팅언어가 됐다. 기업인턴, 스터디, 기업이 주도하는 해외봉사, 학점인정, 공모전과 같은 과거에는 비상업적 부분들이 시장에 빼앗겼다.

연간등록금 1천 만원의 시대가 열어젖힌 것은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조건의 변화다. 1천 만원을 주고 대학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만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또 다른 조건이 학업성적인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학업 성적 역시 부모의 헌신적인 투자에 비례한다. 대학입학의 조건이 바뀌면서 대학등록금의 인상이 '대학의 퀄리티'를 보장해준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명품대학이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학벌은 기존의 지적, 사회적 차이와 더불어 명품매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과 재래식시장 밖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의 경제적 차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대학안의 관계는 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과의 소비적 관계로 변했다. 밥을 먹고 함께 어울려 노는 일상생활에서의 소비활동에 따라서도 관계맺기의 방식은 변한다. 경제적 동질성 외에 학문과 가치의 동질성에 따른 관계는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행위는 일회적이고 개별적이다. 그래서 대학사회속의 개인은 외롭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한 조연자는 10대 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부모이다. 동아리활동여부, M.T여부, 어학연수 등등 모두 부모와의 관계, 즉, 사적관계를 통해서 해결한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20대들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20대의 희망, 기본소득

1. 주체의 변화: 기본소득은 주체변화의 첫 번째 조건.

기존 88만원 세대의 담론은 구조의 단단함만을 확인시켜줬다. 2007년 우석훈 강연회 이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이 많았다. 중요한 것은 20대들이 자아를 찾고 자기 삶을 사는 사춘기가 필요함이다. 부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가족'이나 '개인적 성공'이라는 사적 관계 속에 있는 20대들을 '사회적 관계'로 재구성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은 20대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하다. 현재 이 물적조건들은 모두 사적인 방법으로 조성된다.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반대로 공적으로 제공된다. 인간의 자립이 공적인 삶과 연대, 정치적 삶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2. 두 번째 변화의 가능성: 승자독식 구조의 붕괴, 창의적 노동, 대안경제의 탄생.

지금까지의 노동과 자연을 착취하는 형태의 자본주의 성장방식은 그 한계가 들어났다. 최근의 눈사태는 자연에 대한 착취의 결과였고, 돈벌이가 안 되어서 부동산에 자본이 몰렸다가 터진 서브프라임의 사태는 지금의 경제구조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이명박식 뉴딜정책역시 과거의 경제적 한계가 농후한 경제정책이다.

돌봄노동, 사회적 기업, 인권, 환경과 같이 이윤이 아닌 가치의 생산이, 지식문화산업이 신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시장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신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경제체제의 형성과 연결되어있다. 이것은 물론, 창의적 노동자가 있는 사회, 즉 새로운 경제체제에 맞는 교육시스템 하에서 가능하다.

10대 때부터 사교육시장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진 '인적자원'은 비효율적이다. 그 비용역시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인재는 시험문제를 잘 풀고 종속적인 현재의 20대들이다.

최근 20대 벤처, 1인기업 이야기가 대안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승자독식의 경쟁구조와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다른대안이 없는 시스템하에서는 허울 좋은 말일뿐이다.

기본소득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뿐만 아니라, 대학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으로 기능한다.

인간의 삶이 보장되어야 만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으며,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자신의 철학과 무관한 법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감독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굳이 대학에 가지 않고, 어릴 때부터 단편영화들을 촬영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학문을 하고 싶은 이들은 인문학과 기초과학과 같이 소위 '배고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공부 할 수 있다. 20대의 청년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가 생존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이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마음껏 자신의 학문을 연구하는 20대의 미래이길 기대해본다.

패륜적 기본소득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지위

근대 사회에서 청소년, 아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제도로 학교와 가정을 꼽을 수 있다.(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학원’도 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 문제에 비해 가정에서의 청소년인권 문제는 잘 공론화되지 않는다. 이는 학교가 제도화된 공적 공간이며 집단적, 조직적 제도인 반면 가정은 사적 공간,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가정이 ‘제도’라는 말 자체에도 반발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학교에서의 체벌과 가정에서의 체벌, 학교에서의 종교 강요와 가정에서의 종교 강요 등을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는 쉽게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통계 등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것들(특히 청소년‘활동가’들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법 제도를 통해서 보면 가정에서의 청소년들의 지위를 알 수 있다. 민법에는 친권의 효력으로 친권자¹⁴가 청소년을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913조), 청소년의 거주지를 지정할 권리(914조), 징계할 권리(915조), 재산 관리권(916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부모, 후견인 등의 친권자가 정하는 곳에서만 살아야 하고, 친권자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친권자에게 자의적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으며(주로 체벌을 하거나 용돈을 줄이거나 외출금지를 시키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등), 재산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진로 결정 등에서도 강압에 노출되기 쉽다. 친권자 개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겠지만, 제도적.문화적 조건만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적 지위에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아나키즘은 근대 사회가 “아동을 부모의 부속물로 바라볼 뿐, 아동 역시 자율적 존재로서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꽤 유명한 아나키스트인 바쿠닌 또한 “아동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며, 심지어 사회에 소속된 사회적 소유물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¹⁵ 페미니즘 쪽에서도 남성 가부장과 여성 사이의 권력관계에 더해서 아동에 대한 권력관계를 다루는 논의들이 있으며, 우에노 치즈코 또한 세대간의 지배 종료를 페미니즘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안했던 적이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정 안에서의 지위는 많은 부분 경제적인 종속성에서 비롯된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다. “말 안 들어? 그럼 용돈 없어!”, “내 말 듣기 싫으면 나가. 여기가 니 집이야? 니가 입는 옷 먹는 거 다 누구 돈으로 산 건데?” 용돈 뿐 아니라 의식주 전체를 친권자에게 의지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친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압박의 수단이란 무궁무진하다. “내가 너 키우느라 들인 돈이 얼마데” 등 한국 특유의 높은 보육.교육비 때문에 (좀 넓게 잡은) 중산층 이상의 친권자들이 가지는 투자의식과 주도권 등도 크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도입은 가정 안에서 청소년들의 지위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선 기본소득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또한 가정의 경제력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어느 정도 협상력과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액수와 비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친권자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다. 보다 독립적이고 덜 의존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미래에 자신들에게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돌려주기를 바라

14 아버지 부에 어머니 모자를 쓰는 부모라는 표현은 정상 가족 중심적 표현. 그렇다고 ‘보호자’ 같은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그들과 청소년들 사이의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친권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낫다.

15 「아나키즘과 청소년 해방」. 마크 시버스타인 Marc Siverstein 지음.

는 친권자들에게는 투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또 자신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됨에 따라 청소년을 채찍질해서 사회 상층부에 쫓겨 넣을 동기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친권자들도 똑같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니까 가정 안에서 경제력의 부담 정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돈이란 같은 액수더라도 어느 정도 있는 자들보다는 없는 자들에게 더 효용이 큰 법이다. 일단 가정 안에서 가지는 경제력의 비율이 0에서 10이 되는 것은 발언권이나 협상력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기본소득 모델에서는 소득이 많은 친권자들은 세금으로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좀 잘 사는 가정 안에서는 경제력의 분배 효과를 가지게 된다.

여차하면 가출할 수 있다는 것도 청소년들의 가정 안에서의 지위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출은 자신이 원하는 주거를 요구하는 일종의 투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출을 해도 주거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점에서 가출의 리스크가 컸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가출 후의 리스크가 크게 줄 것이다. 가출 후의 일차적 생활에서가 그렇고, 이차적으로 가출로 인해 정해진 레일에서 빠끗하기라도 하면 낙오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¹⁶ 여차하면 파업이든 태업이든 할 수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듯이, 기본소득은 가출 등 가족의 틀을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이 되면서 청소년들의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독립 시기가 빨라지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 생계에 필요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계속 돈을 모아서 주거를 마련하고 친구들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방식으로 독립을 시도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대학 진학의 보편화에 청년실업이던 어찌니 하면서 점점 늦어지고 있는 독립이 앞당겨진다는 것은 10대, 20대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뜻한다.

요컨대 기본소득은 더 이상 기존의 부모-자식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내고,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친권자 말 잘 듣고 나중에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여 효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의존적으로 살던 관계가 좀 더 독립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정 안에서의 투쟁¹⁷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에서의 권력관계들을 공론화하면서 변화시키는 청소년들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 윤리를 파괴한다는 점에서는 실로 '패륜적'이다.

문화적 어려움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 청소년들의 가정에서의 지위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문화적인 문제나 여러 제도적인 문제들에 얽혀 있다. 민법이나 노동법 같은 데부터 넓게 본다면 교육제나 선거연령, 사회적 인식 등까지도 모두 청소년들의 독립적인 삶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제적 토대가 달라지면 상층 구조는 다소 오차가 있더라도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식으로 낙관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기본소득 도입 자체에서부터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요인들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높다. 청소년들이 세뱃돈 압수당하듯이 기본소득을 받자마자 친권자들에게 압수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 1명을 더 낳으면 그만큼 기본소득을 더 번다고 생각해서 무슨 자동으로 돈을 버는 존재로 생각하고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친권자들도 나타날 수 있다. 출산율은 높아질 거 같지만, 그게 좋은 쪽으로 작용할지 나쁜 쪽으로 작용할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다.¹⁸

기본소득 도입 초기에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판단능력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히 청소년들은 (사실은 20, 30대들도 좀 해당) 경제적 주체가 되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안 좋은 쪽으로 발

16 이 이차적 리스크 때문에 가출 또한 어느 정도 계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17 지금까지 이수나로에서 이야기 나온 전술만 열거한다면, 무단외박, 가출, 화장실 점거, (부모가 꽤 명망 있는 활동가인 경우) 좌파 언론에 기고 등이 있는데,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 투쟁 방식을 여러 가지로 확대시켜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8 출산율이 높아지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 난 아직은 출산율이 좀 낮은 쪽을 지지하는데.

휘한다면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나 명품 소비 문화 등에 의해 기본소득을 다 쓸지도 모른다.¹⁹ 지금도 빈곤층 가정의 청소년에서부터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 청소년들의 독립에 기여하기보다는 명품이나 10대 마케팅에 주력하는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다면, 뭐 아주 나쁜 건 아닐지 몰라도 최선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문화적 변화에 더해 어떻게 경제적 주체로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을 교육할지, 이러한 소비 문화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계획해야 할 문제이다.

가능성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같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더 빈곤하고 더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효용이 있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기본소득 도입의 이해당사자 중에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며, 그 자체로 청소년들을 해방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기본소득의 도입이 청소년들이 친권자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지금의 사회적 시선으로 본다면 '패륜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중 하나일 수는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과정 자체, 그리고 기본소득에서 청소년들(0세~19세 정도)이 배제되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 높은 투쟁이 될 것이며, 기본소득 도입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독립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역시 난이도 높은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운동과 제도는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 전까지는 이야기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새로운 사회로 가는 가능성을 말이다.

19 이런 기업의 마케팅 전략 문제는 『88만원 세대』가 잘 짚어내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기본소득을 수령한 아동을 납치하여 기본소득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까지도 상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지도...